

의안 번호	2382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3.(월) 김태욱 의원 외 9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2. 3.(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2. 18.(화)

2. 제안설명 요지(김태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안 제4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안 제5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모범지침 배포 등(안 제8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안 제9조)
-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안 제10조)
-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안 제11조)

-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안 제12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안 제13조)
- 예산의 지원(안 제14조)
- 위탁(안 제15조)

다. 근거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